

동학농민군의 첫 번째 승전일, 혁명 전개 전환점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본보 2월 20일자 1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아 기념대회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가 결성된 지 25년만의 쾌거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민중항쟁으로, 한국근대사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청·일전쟁을 임태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적 진로를 결정지은 국제적 사건이었다. 비록 제국주의 일본의 무력간섭으로 실패했지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한민족 역사상의 일대 혁명이었다.

이 같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 제정은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유족회, 학계, 전국 기념사업단체 등이 참여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단계에서 좌절된 바 있다.

그 과정을 보면, 1993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아 기념대회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동단협'이 결성되었다. 동단협 결성을 위한 창립 준비위원회는 기념일을 정하여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논의된 기념일이 모두 전북지역으로 국한되는 바람에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기념일 대신 기념주간(4월 25일~4월 30일)을 설정하고 4월 29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백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동단협'에서 기념일 제정은 지역 연고가 없는 전공연구자에게 기념일 선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출범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게 회복심의위원회'에서 기념일 제정 논의 결과 특정일이 최종 선정(2007년)되었으나, 일부 지자체 및 단체의 반대 활동으로 무산되었다.

2011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세 차례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회의 진행 중 불미스러운 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역사적 가치 판단이 중요한 사안을 대중의 무작위 여론



동단협 결성 25년만에 쾌거
국가기념일 제정 노력 끝에
정부·지자체 주도 제정 결정
근대사 획기적 발전 의의 높아



조사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기자회견 및 전국 기념사업단체 대표자의 연서(連署)로 중단되었다.

2013년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유족회 대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별법공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로의 하였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 및 서류미비 등으로 공문이 반려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개최 이후 기념일 제정 재논의의 결정을 내리고 2014년 기념일 제정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역사학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전국화·세계화의 의미 함축,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날, 다른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는 날로 기념일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학계자문단회의에서 특정일을 기념일로 선정하고 건의서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발송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지자체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한 결과 제3의 일자로 기념일

제정 추진에 합의 하는 서명을 받았으나 지역 단체의 반대 및 유성열 의원(당시 교문위원장)이 교문위 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정읍(황토현전승일, 고부봉기일)이나 고창(무장기포일)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2017. 11. 10)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일 제정 추진현황 및 추진방안 검토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념일선정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을 검토한 끝에 2018년 기념일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념일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기념일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기념일 선정은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기념일을 추천받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발송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념일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념일 추천 일자를 제출한 기초자치단체는 정읍(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 고창(무장기포일, 4월 25일), 부안(백산대회, 5월 1일),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에 대해 최초로 대승한 날로 혁명의 전략과 세력이 결집되어 이룩된 동학농민혁명의 전환점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 점이다. 셋째, 황토현전승일은 고부봉기, 무장기포에 이어 백산대회를 거쳐 전주성 입성 및 2차 봉기 등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공을 견인한 우리나라 근대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의의가 대단히 높다고 본 점이다.

정읍시는 관공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상, 동학농민혁명 관련 최초의 조형물이 건립된 상징성, 1968년부터 민간주도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최 및 정읍 지역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참여도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발표를 했다. 실제 정읍은 198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이념 정치 지도자가 참석하여 연설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기념제 개최와 관련하여 탄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정읍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부 지자체 및 단체가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기념일 제정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국무회의 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최종 제정되면서 앞으로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은 커다란 전기(轉機)를 맞을 전망이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을 세 계 3대 농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토대 마련을 위해 학술토론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더 나아가 북측과 접촉하여 공동 학술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고부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봉기였다는 사실을 정계·학계·단체 등과 연계하여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UCC제작, 수확여행이나 현장학습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코스 포함, 동학농민혁명 교육 자료 편찬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라나는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선양사업이 먼 미래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계획하여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정읍과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린다는 각오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로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재확인 된 것이며, 앞으로 타 지자체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 바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